광주 국회의원들, 시의회 예결위원 해당 행위 징계 '이견'

민주당 시의원들 예결위 무소속 위원장·국힘 부위원장 선출 후폭풍
"원칙대로 징계" "위원 전원 사퇴했다" 양론… '제식구 감싸기' 지적도

무소속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위원장, 상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윤리심판원에 해당(害黨)행위로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의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감싸기 위해 지역 여론 등은 무시한 채 "(시의회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니 책임을 다했다"는 논리를 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위원장의 공천과 보호'를 대가로 한 '광역·기초 의원의 맹목적 충성'이 악순환되는 "지방자치 구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둘러싼 2100억원대 분쟁 해결 등을 위한 현안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최근 '밀실 쪽지 투표'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원들에 대한 징계문제가 거론됐다.

앞서 민주당은 광주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년차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소속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을 무더기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 회동에서는 최근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야합했다는 의혹을 받은 민주당 소속 충남 논산시의회 의원 3명이 최근 중앙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과 광주시의회의 사례가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의원은 "이미 (예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을 졌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시의원들의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밀실 투표'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선임된 무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논산시의회와 사안 자체가 다르다는 게 주요 논리다. 반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당론을 위반한 해당행위에 따른 중징계' 의견을 광주시당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중징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 했다'는 말은 '(계엄을 선포했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과 뭐가 다르냐"면서 "일부의 주장과 보고서와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가 신속하고 엄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예결위원 9명 중 민주당 소속은 7명인데, 무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만큼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정은 원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힘, 위헌정당 해산감…윤리특위 재구성"

"중요 임무 밝혀지면 국민들 용납 못해"…취임 인사, 국힘은 제외

더불어민주당 광주 일부 국회의원이 광주시의회의 해당행위에 대해 두둔하고 있는 동안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5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가진 정부가 직접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래서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은 과하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엔 어떻겠느냐고 묻자 "제 뜻이 확고하다면 설득할 것"이라면서 "법사위원장 때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리는 사람들 많았지만 제 생각대로 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좋았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을 하지 말라고 할 경우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말고는 누가 말해도 설득이 안되느냐는 질문에는 "(제) 성격상 그렇지 않겠느냐"라면서도 "제가 개인이 아니므로 당 의원, 대통령실, 행정부와 다 조율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른바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과 현시점에서는 대화가 불가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야당 대표들과 만나지만 국민의힘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추진과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위원 동수가 아닌 민주당이 다수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국힘, 與 이춘석 차명 주식 거래 고발

이 "차명 거래 아냐"…민주, 긴급 진상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 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돼 국민의힘이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창을 본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들여다보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광주 북구·광산구, 2차 특별재난지역 포함을"

양부남 의원…이르면 다음주 발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이 이르면 8월 둘째주 중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은 각각 자치구 단위와 동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1차 선포에서 제외됐다"며 "2차 선포에서는 민생을 살피는 차원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내일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도 건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광주에서는 사망 2명, 이재민 417명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총 3599건(공공 470건, 민간 3129건), 피해 복구비는 총 332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부담률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복구비와 생계지원금도 확대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드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